

## 경제안보 전략 프레임워크를 통한 통상 및 산업정책 분류\*

김 현 정\*\*

### •요 약•

본 논문은 경제안보 정책을 새롭게 제안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제시한다. 경제안보 정책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주요 글로벌 행위자들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접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모두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 접근 방식은 크게 다르다. 미국은 중국과의 상호의존성 무기화에 대응하고 패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원칙 중심의 정책을 추구한다. 반면, EU는 규제 중심의 정책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역내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첨단산업 보호와 육성에 중점을 둔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은 명확한 정책 방향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들의 정책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처럼 명확히 조정된 진영 논리에 기반한 전략을 채택하거나, EU처럼 위험 회피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무역 의제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로, 명확한 국가적 경제안보 정책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EU가 보여준 경제안보 정책의 중심축을 참고해, 한국도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논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경제안보, 전략적 프레임워크, 상호의존성 무기화, 첨단산업, 비무역 의제

## I. 서론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라는 주제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핵심적인 정책 이슈로 자리잡았다. 주요국들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 전략, 공급망 계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1080911).

\*\* 동아대학교

획, 수출통제, 산업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안보와 관련된 의제들은 교차적 특성, 다발성으로 인해 서로 간섭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학술적 측면에서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다. 경제안보는 국가의 경제 자산과 인프라를 보호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제적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개념은 국가안보와 경제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글로벌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부잔(Buzan 1998)의 코펜하겐 학과는 경제안보를 안보 연구의 새로운 영역으로 제시하며,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강조하였다.

미·중 갈등 이후, 경제안보는 더 이상 안보의 부수적 영역으로만 다루어지지 않으며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안보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기존의 경제안보는 주로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된 안보문제로서,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개념이었다. 이 시기에는 실업, 빈곤, 금융 불안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기업적 위기관리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으며, 경제안보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경제 불황이나 금융 위기로 인해 기업이 파산하거나 실업률이 급증할 때,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 안보 문제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안보의 개념은 국가 차원에서 재정의되며,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위기관리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다툼 등으로 인해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이제 경제안보는 첨단기술 보호, 전략자산 확보,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같은 국가 대 국가, 진영 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규제, 수출통제, 기술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이러한 정책들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에서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경제안보 정책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경제안보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정책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정책의 적용 대상과 목표에 따라 구분되며, 경제적 우선성과 안보적 우선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분석한다. 먼저, 첫째(ESF<sub>11</sub>) 유형은 상호의존성 무기화 또는 무기화 대응을 포함하며, 주로 안보 우선 정책으로 분류된다. 반면, 두 번째(ESF<sub>12</sub>) 유형은 첨단산업 지원 및 관리를 목표로 하여 경제적 우선성이 강조되는 정책이다. 세 번째(ESF<sub>21</sub>) 유형은 비무역의제 및 노동, 인권, 환경과 같은 비안보 의제를 다루며, 안보적 비우선 정책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ESF<sub>22</sub>) 유형은 전략적 진영 간 자유무역협력을 목표로 하여 경제적 우선 정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네 가지 정책 유형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대 경제안보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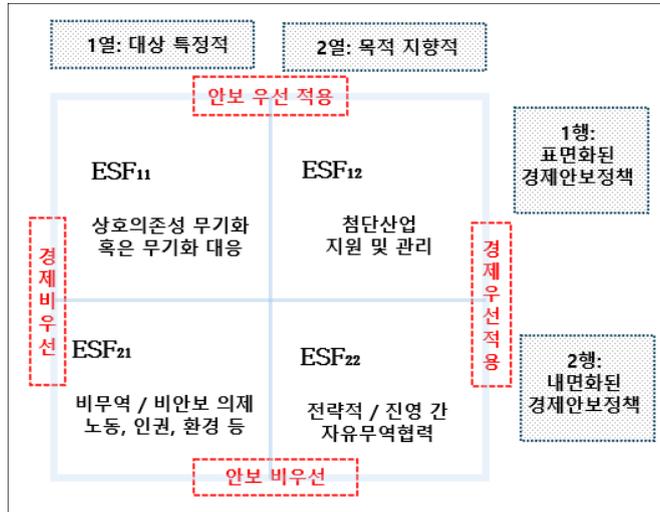
책이 국가 간 상호작용 및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세계화가 지경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 EU의 경제안보 정책과 그 범위, 그리고 이들 국가 간 정책 유사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 II. 경제안보전략 프레임워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현대의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의 교차점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경제안보의 개념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안보 전략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와 안보의 우열 관계를 통해 경제안보 정책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안보는 단순한 경제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경제적 안보와 국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주요국들이 자국의 경제정책을 안보의 일환으로 수립하게 되는 배경을 제공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경제안보의 개념은 ‘상호의존성 무기화’와 ‘기술의 안보화’ 개념으로 집약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요소수 수출통제나 호주의 석탄 수입 제한과 같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상호의존적 구조가 국제 갈등을 통해 국가안보 위협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술적 우위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기술의 안보화는 첨단기술 경쟁이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특히 첨단기술의 혁신 속도가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여기서 기술 경쟁은 단순히 산업적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군사적, 경제적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정학적 귀환을 부추기고, 글로벌화의 취약성 노정함으로써 외교안보와 경제의 연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EU의 경제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그림 1>의 경제안보 프레임워크(ESF: Economic Security Framework)는 경제안보 정책을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국가의 경제 및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한다. 각 영역은 정책의 적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분류되며, 안보와 경제적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적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 장에서는 ESF의 네 가지 영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각 영역이 경제안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출처: 필자 작성

〈그림 1〉 경제안보 전략 프레임워크

① ESF11: 상호의존성 무기화 혹은 무기화 대응

ESF11은 경제안보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시되며, 경제 비우선 정책을 의미한다. 이 영역에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무기화 혹은 무기화 현상에 대한 대응이 주요 과제로 설정된다. 상호의존성 무기화란 특정 국가가 자원이나 공급망에서의 독점을 무기로 삼아 다른 국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무기화는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대응은 안보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ESF11에서는 상호의존성 무기화에 대한 방어적 전략과 국제협력을 통해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② ESF12: 첨단산업 지원 및 관리

ESF12는 안보 우선 정책이지만, 경제적 우선순위도 고려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첨단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첨단산업은 기술적 우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기술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경제안보의 핵심이다. 첨단기술이 적대 국가에 의해 먼저 발전하거나 탈취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SF12는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 보호 전략을 통해 첨단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③ ESF21: 비무역/비안보 의제 - 노동, 인권, 환경 등

ESF21은 안보가 비우선인 동시에 경제적 비우선 정책을 다루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비무역 의제(NTA: Non-Trade Agenda)를 중심으로 노동, 인권, 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이슈를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은 경제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에서 NTA는 중요한 정책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ESF21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며, 경제안보의 넓은 의미에서 글로벌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④ ESF22: 전략적/진영 간 자유무역협력

ESF22는 경제적 우선 정책으로, 안보가 비우선적인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경제적 자유무역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국가 간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이 영역의 핵심이다. ESF22는 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협력정책을 통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하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우선적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협력에서 안보적 우려가 덜한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국가 간 경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정책이지만, 단순한 자유무역이 아닌 진영 간 연대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글로벌화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의 경제안보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진영 중심의 연합이 강조되고 있다.

ESF는 경제안보 정책을 안보와 경제적 우선순위에 따라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는 모델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경제와 안보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본 장에서는 ESF의 네 가지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영역의 특성과 현대 경제안보에서의 적용을 논의한다. 나아가 해당 틀은 행과 열에 따라 성향이 구분된다.

1행은 대외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경제안보정책을 다룬다. 이 영역에서는 국가가 경제안보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삼아 정책을 수립하고, 외부에 그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2행은 경제안보 정책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국가 내부적으로 조용히 진행되는 정책을 다룬다. 이러한 정책들은 외부적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안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들이 포함된다.

1열(대상 특정적 정책)은 특정 대상(국가, 산업, 기술 등)을 겨냥한 경제안보정책을 다룬다. 이는 특정 국가나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거나 특정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지닌 정책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2열(목적 지향적 정책)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안보정책을 다룬다. 이는 경제적 이익 또는 안보적 이익을 달성

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정책으로, 대상의 범위는 넓으나 그 목표가 명확하다.

ESF는 정책의 적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안보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상호의존성 무기화에 대한 대응, 첨단산업 보호, 비무역 의제, 진영 간 자유무역협력 등 다양한 목표가 ESF를 통해 명확히 구분된다. 특히, 글로벌화 시대와 달리 현재의 경제안보 환경에서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보다는 진영 간 협력과 전략적 연대가 우선시되는 추세로, 국가들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 Ⅲ. 표면화된 경제안보 정책: 미국 및 EU의 사례

#### 1. 대상 특정, 표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sub>11</sub>)

〈표 1〉은 미국과 EU의 경제안보 정책 중 각각 ‘대상 특정, 표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sub>11</sub>)’ 영역에서 다루는 정책과 전략들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상호의존을 무기화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공급망 재편과 국가사이버 안보전략, 해외투자심사와 행정명령, 수출통제 등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된다. EU는 공급망 재편과 역외보조금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입규제조치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스크리닝을 통해 경제안보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자원 공급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표는 미국과 EU가 각각 직면한 경제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각국의 경제안보 전략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의 대상 특정, 표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sub>11</sub>)은 다음과 같다. 2023년 6월,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전략을 기존의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에서 ‘디리스크’(De-risking)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였다.<sup>1)</sup>

1) “중국 겨냥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크’ 공식화하는 미국 의도는”,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AE80BE0085E32F8DF5E827473CD4FDC3.Hyper?no=1833848](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AE80BE0085E32F8DF5E827473CD4FDC3.Hyper?no=1833848) (검색일: 2024.05.01).

〈표 1〉 미국과 EU의 대상 특정, 표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sub>1</sub>)

미국	EU
IRA 내 상호의존 무기화 대응 공급망 재편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해외투자심사 행정명령 수출통제	공급망 재편 역외보조금 정책 수입규제조치 FDI 스크리닝 핵심원자재법

출처: 필자 작성

이는 미·중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속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접근을 뜻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로 인해 동맹국들의 불만을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하원은 2023년 1월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sup>2)</sup> 이 위원회는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안보적 위협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책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 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우선사항은 공급망 복원 및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의존 종식,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대응,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도용을 방지하고, 미국의 개인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것, 중국공산당의 독재적 통치와 자유세계의 가치 대조 등을 다루고 있다.<sup>3)</sup> 동 위원회는 2023년 2월 28일 첫 청문회(중국공산당의 미국에 대한 위협(The Chinese Communist Party’s Threat to America))를 개최하여, 미국 내 8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TikTok)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였다.<sup>4)</sup> 이후 2024년 3월 연방 하원은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을 완전매각할 때까지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sup>5)</sup> 해당 조치의 결과로 의회는 ‘해외 적대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Protecting Americans

2)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공식명칭은 ‘중국공산당과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다.

3) Olmem, Andrew, “The New Congressional Select Committee on Economic Competition with China”, Mayer Brown, <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2023/05/the-new-congressional-select-committee-on-economic-competition-with-china> (검색일: 2024.05.01).

4) “House establishes tough-on-China select committee.” Politico, <https://www.politico.com/news/2023/01/10/house-china-select-committee-00077312> (검색일: 2024.05.01).

5) “미국 하원 상임위, 틱톡 금지법안 만장일치로 가결”,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8565> (검색일: 2024.05.01).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을 채택하였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은 바이든(Biden)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공식적으로 추진되었다. 2021년 2월 24일, '공급망 안정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17)'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주요 공급망 리스크를 평가하는 과정을 시작했다.<sup>6)</sup> 그 결과 발표된 보고서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중요 광물 및 소재, 의약품 등 핵심 분야에서의 공급망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권고안을 포함한다.

ESF<sub>11</sub>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국방생산법(DPA: Defense Production Act)의 활용, 바이아메리칸법(Buy American Act)의 강화, 불공정 무역 관행에의 대응 및 수출 통제, 공급망 교란 대응 태스크포스(Task Force) 구성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정책은 대중 수입통제와 수 통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대중 관세 부과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러 대부분 유지되었으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 중요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sup>7)</sup> 2024년 5월에는 약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산업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이 2022년 10월 개정되어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강화되었다. 미국 정부는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입장국(일본, 네덜란드 등)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등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sup>8)</sup>

미국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2023년 3월에는 일본과, 2023년 10월에는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차 배터리와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리튬, 니켈 등의 광물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sup>9)</sup> 또한, 광물 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을 통해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협력체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EU 등

6) 이효영,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안보 정책”, 『EAI 워킹페이퍼』, 미중경제전쟁과 한국의 선택 시리즈 7, 2024, p.3.

7) Matthew P. Goodman “Weighing Biden’s China Tariff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article/weighing-bidens-china-tariffs> (검색일: 2024.06.01).

8) “About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https://www.bis.gov/regulations> (검색일: 2024.07.01).

9) Camellia Moors, “US, Australia to expand cooperation along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S&P Global,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us-australia-to-expand-cooperation-along-critical-minerals-supply-chains-78064739> (검색일: 2024.05.01).

16개의 주요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EU의 대상 특정, 표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sub>11</sub>)은 다음과 같다. ESF<sub>11</sub> 관련 EU의 정책 및 규제는 법률 내에서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실상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재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물론 해당 정책이 이후 관련 사업에서 다른 역외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정책의 특성상 보편적으로 모든 기업을 모니터링하여 동시 감시하여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국을 특정하여 진행하기 나름인 것이다. EU는 역외보조금 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을 2023년 1월 12일 발효하여, 2023년 7월 12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동 규정은 EU 내에서 경쟁 왜곡을 초래하는 해외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무역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SR은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핵심산업에 적용되며, 공공입찰이나 기업인수합병(M&A) 과정에서 역외보조금이 확인되면 시장 왜곡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sup>10)</sup> 화웨이가 비공개 입찰에서 경쟁사보다 60%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례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EU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보조금 남용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U는 2023년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제안하였고, 2024년 5월 발효되었다. 동 법안은 EU의 기후 및 디지털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34개의 핵심원자재와 17개의 전략 원자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CRMA는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최소 10%를 자체 추출하고, 40%를 EU 내에서 처리하며, 25%를 재활용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단일 제3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의존도를 6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법안은 EU의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한다.

미국과 EU는 각각 자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상이한 정책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디리스팅과 첨단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수입 및 수출통제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역외보조금 규제와 핵심 원자재법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면서

10)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European Commission,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foreign-subsidies-regulation\\_en](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foreign-subsidies-regulation_en) (검색일: 2024.05.01).

11)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 European Commission,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green-deal-industrial-plan/european-critical-raw-materials-act\\_en](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green-deal-industrial-plan/european-critical-raw-materials-act_en) (검색일: 2024.05.01).

도,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두 경제권의 경제안보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각국의 경제전략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2. 목적 지향, 표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sub>12</sub>)

〈표 2〉는 목적 지향, 표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sub>12</sub>) 유형에 관한 미국과 EU의 경제안보 정책을 비교한 내용으로, 양측이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나열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각기 다른 산업과 법안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자 한다.

〈표 2〉 미국과 EU의 목표 지향, 표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sub>12</sub>)

미국	EU
IRA 내 투자, 지원, 세액공제 등 조치 반도체 산업 지원 국가핵심·신흥기술 표준전략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배터리법 반도체법

출처: 필자 작성

우선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은 최근 몇 년간 크게 강화되었으며, 이는 특히 반도체,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률 및 전략의 도입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며,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래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안보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기술 및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과 세액공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국가핵심·신흥기술 표준전략(NSSCET: United States Government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한다.

IRA는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경제안보 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은 주로 첨단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세계 개혁 및 의료 비용 절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IRA는 청정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의 경우, IRA

는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sup>12)</sup> 이는 미국 내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조치이다.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미국의 반도체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에 제정된 법안이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미국이 반도체 제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술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HIPS Act는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 및 확장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5%의 세액공제와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sup>13)</sup>

국가핵심·신흥기술 표준전략(NSSCET)은 미국이 인공지능, 바이오소재, 5G/6G 통신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표준 개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NSSCET를 통해 국제표준화 경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sup>14)</sup>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IJJA)은 2021년 11월 발효된 법안으로, 미국 내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은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 전통적인 인프라부터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브로드밴드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sup>15)</sup> 특히 IJJA는 청정에너지에 약 5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스마트 그리드, 배터리 기술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또

12) 강준영,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산업 육성법」이 남긴 것”, KDI, [https://eiec.kdi.re.kr/public/columnView.do?cidx=14053&sel\\_year=2022&sel\\_month=10](https://eiec.kdi.re.kr/public/columnView.do?cidx=14053&sel_year=2022&sel_month=10) (검색일: 2024.05.01).

13)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Final National Security Guardrails for CHIPS for America Incentives Program”, U.S. Department of Commerce,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3/09/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final-national-security> (검색일: 2024.05.01).

14) “Fact Sheet: NIST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https://www.nist.gov/standardsgov/fact-sheet-nist-and-united-states-government-national-standards-strategy-critical-and> (검색일: 2024.05.01).

15) “Fact Sheet: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Deal”,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11/06/fact-sheet-the-bipartisan-infrastructure-deal/> (검색일: 2024.05.01).

한 IJA는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법(BABAA)’을 통해, 철강, 제조품, 건축자재 등 미국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자재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sup>16)</sup>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국제적 비판도 존재한다. 외국산 자재를 배제하는 이러한 정책이 WTO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목적 지향, 표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12) 유형에 관한 EU의 대표적 경제안보 정책은 EU 반도체법(Chips Act)과 배터리법이 있다. 우선 EU는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반도체법은 2023년 9월에 발효되었으며, 이는 유럽 내 반도체 제조 능력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EU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생산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 법안은 유럽이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법은 EU 내에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동원해 43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반도체 설계와 패키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sup>17)</sup> 또한, EU는 이를 통해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고, 중국 등 외부로부터의 기술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2023년 7월에 발효된 배터리법(배터리와 폐배터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EU) 2023/1542)은 EU가 배터리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법안이다.<sup>18)</sup> 이 법안은 배터리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며,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률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여 배터리 생산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배터리법은 배터리 내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중요한 원소들의 재활용 비율을 설정하였으며, 2027년까지 휴대용 배터리 수집률을 63%로, 2030년까지 73%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sup>19)</sup> 이를 통해 EU는 자원 효

16) “DOE Fact Sheet: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Deal Will Deliver For American Workers, Families and Usher in the Clean Energy Future”, Energy.Gov, <https://www.energy.gov/articles/doe-fact-sheet-bipartisan-infrastructure-deal-will-deliver-american-workers-families-and-0> (검색일: 2024.05.01).

17) “European Chips Act”, European Commission,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european-chips-act\\_en](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european-chips-act_en) (검색일: 2024.05.01).

18) “Regulation (EU) 2023/15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23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Text with EEA relevanc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542> (검색일: 2024.05.01).

19) “Batteries”, European Commission,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batteries\\_en](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batteries_en) (검색일: 2024.05.01).

올성을 극대화하고,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들은 첨단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미국의 경제안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며,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대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U의 경제안보 정책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첨단산업 보호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EU와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은 일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재활용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EU의 접근 방식은 미국과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U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경제안보를 확보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IV. 내면화된 경제안보 정책: 미국 및 EU의 사례

##### 1. 대상 특정, 내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sub>21</sub>)

〈표 3〉은 대상 특정, 내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sub>21</sub>) 유형에 관한 미국과 EU의 경제안보 정책을 비교하여, 각국이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요 법안 및 규제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에서 미국과 EU는 각각 내면화된 경제안보 정책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 관계에서 비시장적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즉 해당 정책들은 흔히 경제안보 정책으로 인식되지 않으나, 실상 강력한 경제안보 정책의 한 유형이 되고 있다.

〈표 3〉 미국과 EU의 대상 특정, 내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sub>21</sub>)

미국	EU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6개국(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무역 관련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 정책 및 관행 공동성명 발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실사의무지침(CSDDD)

출처: 필자 작성

미국과 EU는 ESF<sub>21</sub> 유형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안들은 공급망 안전, 인권문제, 환경보호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과 같은 강력한 무역 규제를 통해 인권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기업실사의무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통해 환경보호와 윤리적 무역 관행을 강화하고 있다.

UFLPA는 미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률로, 2022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추정하고, 수입업체가 강제노동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강제노동 여부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sup>20)</sup> UFLPA는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 내 기업들이 윤리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의 강력한 무역 규제 수단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sup>21)</sup> 또한, 이 법은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이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미국 내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도구로 활용된다.

‘6개국(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무역 관련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정책 및 관행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Economic Coercion and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은 2023년 경제적 강압과 불공정한 비시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된 중요한 국제협력 선언이다. 이 공동성명은 주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적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6개국의 공통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각국은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이 글로벌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성명은 글로벌 무역 질서가 특정 국가의 비시장적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며,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공동성명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비시장적 정책과 경제적

20) “Hear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Threat to America”,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Repository, <https://docs.house.gov/Committee/Calendar/ByEvent.aspx?EventID=115402> (검색일: 2024.05.01).

21) Michael Beckley “Five key takeaways from US House hearing on China”, Asia Times, <https://asiatimes.com/2023/03/five-key-takeaways-from-us-house-hearing-on-china/> (검색일: 2024.05.01).

강압에 대해 6개국이 협력하여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 중요한 문서로,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향후 국제 무역 관계에서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적 행위를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에 대해 수입 시 공정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이다. 이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sup>22)</sup> CBAM의 주요 목적은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글로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기업실사의무지침(CSDDD)은 EU가 기업들에게 인권, 노동,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대응하도록 의무화한 법적 지침이다. 이 지침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또는 실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기업은 이러한 위험을 식별하고,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한다. CSDDD는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며,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sup>23)</sup> 기업은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기업 정책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지침은 EU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와 인권존중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과 EU의 경제안보 정책은 각각 자국의 안보와 윤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규제 수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UFLPA를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추구하며, EU는 CBAM과 CSDDD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서 윤리적 무역 관행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양측의 ESF<sub>21</sub> 유형 경제안보 정책은 글로벌 무역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강제노동, 탄소 배출, 인권침해 등 비무역 의제가 국가 간 무역 관계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2)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ropean Commissio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검색일: 2024.05.01).

23)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2PC0071> (검색일: 2024.05.01).

## 2. 목적 지향, 내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sub>22</sub>)

〈표 4〉는 목적 지향, 내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sub>22</sub>)에 관한 미국과 EU의 경제안보 정책을 비교한 내용이다. 표는 미국과 EU가 각각 추구하는 전략적 지향점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ESF<sub>22</sub> 전략으로 경제안보 시대 제시된 대표적인 소다자협력체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와 블루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가 있다. IPEF는 2022년 5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시킨 소다자경제 협력 플랫폼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지정학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다. IPEF는 14개 회원국<sup>24)</sup>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국가와 함께 경제 공급망, 디지털 경제, 인프라 투자,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PEF는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경제 협력체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의존성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sup>25)</sup>

〈표 4〉 미국과 EU의 목적 지향, 내면화된 경제안보 정책(ESF<sub>22</sub>)

미국	EU
미국 중심의 소다자협력 IPEF 블루닷 네트워크	다자협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 글로벌 게이트웨이

출처: 필자 작성

IPEF는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의 경제적 패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IPEF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IPEF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관세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sup>26)</sup> 또한, 참여국들 간 이익 균형과 실

24) IPEF는 미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피지로 구성되었다.

25)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https://ustr.gov/trade-agreements/agreements-under-negotiation/indo-pacific-economic-framework-prosperity-ipef> (검색일: 2024.10.01).

26) Aidan Arasasingham, Emily Benson, Matthew P. Goodman, and William Alan Reinsch, “Unpacking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Launch”, CSIS, <https://www.csis.org/analysis/unpacking-indo-pacific-economic-framework-launch> (검색일: 2024.10.22).

질적인 협력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블루닷 네트워크는 2019년 미국, 일본, 호주가 주도하여 출범한 글로벌 인프라 투자 이니셔티브로,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체다. 블루닷 네트워크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국가와 민간 투자자 간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블루닷'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그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블루닷 네트워크의 주요 목적은 양질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중국의 BRI와는 달리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sup>27)</sup> 그러나 블루닷 네트워크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네트워크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으며, BRI와 같은 대규모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sup>28)</sup> 또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글로벌 표준을 충족시키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EU의 ESF<sup>22</sup> 전략으로 경제안보 시대 제시된 대표적인 전략적 다자협력체로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전략을 중심으로 미국과 EU의 내면화된 경제안보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이 두 경제강국의 목표 지향점은 지정학적, 경제적 차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EU가 제시한 대외 인프라 투자 전략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투자와 투명한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이 전략은 특히 디지털, 에너지, 교통 등의 인프라 분야에서 신흥국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의 BRI에 대한 대응으로서,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하고 각국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2023년 글로벌 게이트웨이 창립 포럼에서 EU 집행위원장 폰 데어 라이엔은 BRI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글로벌 게이트웨이가 국가 주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더 나은 선택을 제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sup>29)</sup>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27) Carol Volk and Juan Garin, "The Blue Dot Network: A Global Certification Framework for Quality Infrastructure", OECD, <https://media.infrastructureinvestor.com/uploads/2023/04/The-Blue-Dot-Network-by-OECD.pdf> (검색일: 2024.10.22).

28) Edward Ashbee, "The Blue Dot Network, economic power, and China's Belt & Road Initiative",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vol. 48, no. 2, 2021.

29) "Opening speech by President von der Leyen at the Global Gateway Forum," European Commission,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news/opening-speech-president-von-der-leyen-global-gateway-forum-2023-10-25\\_en](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news/opening-speech-president-von-der-leyen-global-gateway-forum-2023-10-25_en) (검색일: 2024.08.15).

자 한다. 또한, 이 전략은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EU와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Team Europe’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다자간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sup>30)</sup>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특히 인태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총 45개의 이니셔티브를 진행하며, 디지털 및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EU는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어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자국 중심의 소다자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EU는 다자 협력과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을 통해 중국의 BRI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V. 결론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과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각기 다른 정책적 우선순위와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첨단산업 지원 및 상호의존성 무기화 대응에 중점을 두며, 전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EU는 첨단산업 보호와 규제 중심의 접근을 통해 역내 시장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적 법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경제안보의 주요 과제로 상호의존성 무기화에 대한 대응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미국의 전략은 원칙 중심의 법 적용을 기반으로 하여, 자국 산업과 경제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적국의 기술적 도전과 경제적 위협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EU는 다양한 이슈에 맞춘 규제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27개 회원국의 연합체인 EU가 법적 조화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반영한다. 양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서로 다른 목표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공통적으로 첨단기술 보호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좀 더 유연한 원칙 중심의 접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EU는 보다 엄

---

30) “Global Europe: 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 European Commission,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funding-and-technical-assistance/funding-instruments/global-europe-neighbourhood-development-and-international-cooperation-instrument\\_en](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funding-and-technical-assistance/funding-instruments/global-europe-neighbourhood-development-and-international-cooperation-instrument_en) (검색일: 2024.08.15).

격한 규제 중심의 법 적용을 통해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현재 명확한 경제안보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들의 정책을 추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먼저 자국의 경제안보 목표를 명확히 하고, 상호의존성 무기화 대응과 같은 진영화된 전략을 수립하거나, EU처럼 위험을 회피하는 디리스팅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무역 의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경제안보를 새로운 의제 분야로 인식하고 전반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국가적 경제안보 목표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준영,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산업 육성법」이 남긴 것”, KDI, [https://eiec.kdi.re.kr/public/columnView.do?cidx=14053&sel\\_year=2022&sel\\_month=10](https://eiec.kdi.re.kr/public/columnView.do?cidx=14053&sel_year=2022&sel_month=10) (검색일: 2024.05.01).
- 김현정, “신홍안보로서의 경제안보 형성 과정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대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2권 3호, 2022.
- “미국 하원 상임위, 톱톡 금지법안 만장일치로 가결”,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8565> (검색일: 2024.05.01).
- 이효영,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안보 정책”, 『EAI 워킹페이퍼』, 미중경제전쟁과 한국의 선택 시리즈 7, 2024.
- “중국 겨냥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팅' 공식화하는 미국 의도는”,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AE80BE0085E32F8DF5E827473CD4FDC3.Hyper?no=1833848](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AE80BE0085E32F8DF5E827473CD4FDC3.Hyper?no=1833848) (검색일: 2024.05.01.).
- “About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https://www.bis.gov/regulations> (검색일: 2024.07.01).
- Arasasingham, Aidan, Emily Benson, Matthew P. Goodman, and William Alan Reinsch, “Unpacking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Launch”, CSIS, <https://www.csis.org/analysis/unpacking-indo-pacific-economic-framework-launch> (검색일: 2024.10.22).
- Ashbee, Edward, “The Blue Dot Network, economic power, and China’s Belt & Road Initiative”,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vol. 48, no. 2, 2021.
- “Batteries”, European Commission,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batteries\\_en](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batteries_en) (검색일: 2024.05.01.).
-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Final National Security Guardrails for CHIPS for America Incentives Program”, U.S. Department of Commerce,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3/09/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final-national-security> (검색일: 2024.05.01).

- “Blue Dot Network”,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blue-dot-network/> (검색일: 2024.10.22).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ropean Commissio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검색일: 2024.05.01).
- Carol Volk and Juan Garin, “The Blue Dot Network: A Global Certification Framework for Quality Infrastructure”, <https://media.infrastructureinvestor.com/uploads/2023/04/The-Blue-Dot-Network-by-OECD.pdf> (검색일: 2024.10.22).
- Directive (EU) 2019/193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2PC0071> (검색일: 2024.05.01.).
- Directorate-General for Neighbourhood and Enlargement Negotiations, “Opening speech by President von der Leyen at the Global Gateway Forum,” European Commission,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news/opening-speech-president-von-der-leyen-global-gateway-forum-2023-10-25\\_en](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news/opening-speech-president-von-der-leyen-global-gateway-forum-2023-10-25_en) (검색일: 2024.08.15.).
- “DOE Fact Sheet: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Deal Will Deliver For American Workers, Families and Usher in the Clean Energy Future”, Energy.Gov, <https://www.energy.gov/articles/doe-fact-sheet-bipartisan-infrastructure-deal-will-deliver-american-workers-families-and-0> (검색일: 2024.05.01).
- “European Chips Act”, European Commission,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european-chips-act\\_en](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european-chips-act_en) (검색일: 2024.05.01).
-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 European Commission,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green-deal-industrial-plan/european-critical-raw-materials-act\\_en](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green-deal-industrial-plan/european-critical-raw-materials-act_en) (검색일: 2024.05.01.).
- “Fact Sheet: NIST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https://www.nist.gov/standardsgov/fact-sheet-nist-and-united-states-government-national-standards-strategy-critical-and> (검색일: 2024.05.01.).
- “Fact Sheet: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Deal”,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11/06/fact-sheet-the-bipartisan-infrastructure-deal/> (검색일: 2024.05.01).
-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European Commission,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foreign-subsidies-regulation\\_en](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foreign-subsidies-regulation_en) (검색일: 2024.05.01).
- “Global Europe: 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 European Commission,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funding-and-technical-assistance/funding-instruments/global-europe-neighbourhood-development-and-international-cooperation-instrument\\_en](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funding-and-technical-assistance/funding-instruments/global-europe-neighbourhood-development-and-international-cooperation-instrument_en) (검색일: 2024.08.15.).
- Goodman, Matthew P., “Weighing Biden’s China Tariff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article/weighing-bidens-china-tariffs> (검색일: 2024.06.01.).
- “Hear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Threat to America”,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Repository, <https://docs.house.gov/Committee/Calendar/ByEvent.aspx?EventID=115402> (검

색일: 2024.05.01.).

“House establishes tough-on-China select committee.” Politico, <https://www.politico.com/news/2023/01/10/house-china-select-committee-00077312> (검색일: 2024.05.01.).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https://ustr.gov/trade-agreements/agreements-under-negotiation/indo-pacific-economic-framework-prosperity-ipef> (검색일: 2024.10.01.).

Michael Beckley, “Five key takeaways from US House hearing on China”, Asia Times, <https://asiatimes.com/2023/03/five-key-takeaways-from-us-house-hearing-on-china/> (검색일: 2024.05.01).

Moors, Camellia, “US, Australia to expand cooperation along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S&P Global,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headlines/us-australia-to-expand-cooperation-along-critical-minerals-supply-chains-78064739> (검색일: 2024.05.01.).

Olmem, Andrew, “The New Congressional Select Committee on Economic Competition with China”, Mayer Brown, <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2023/05/the-new-congressional-select-committee-on-economic-competition-with-china> (검색일: 2024.05.0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2PC0071> (검색일: 2024.05.01).

“Regulation (EU) 2023/15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23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Text with EEA relevanc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542> (검색일: 2024.05.01.).

Volk, Carol and Juan Garin, “The Blue Dot Network: A Global Certification Framework for Quality Infrastructure”, OECD, <https://media.infrastructureinvestor.com/uploads/2023/04/The-Blue-Dot-Network-by-OECD.pdf> (검색일: 2024.10.22).

【 Abstract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through  
the Economic Security Strategic Framework

Kim, HyunJung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economic security policies through a newly proposed strategic framework. It categorizes economic security policies into four types, focusing on the strategic approaches of key global actors, specifically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both the U.S. and EU pursue economic security with equal vigor, their approaches diverge significantly. The U.S. emphasizes principles-driven policy implementation aimed at maintaining hegemony and countering the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particularly with China. In contrast, the EU adopts a regulatory-centric model that seeks to minimize risks and stabilize its internal market, focusing on protecting and fostering advanced industries through stringent regulations.

This paper also draws ke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South Korea, lacking a clear direction in its policy approach, must either adopt a heavily coordinated strategy akin to the U.S. or pursue a risk-avoidance framework similar to that of the EU. Additionally, South Korea's policies in non-trade agendas remain underdeveloped, further emphasizing the need for a clearer national economic security framework. The establishment of a well-structured control tower for economic security policymaking, as demonstrated by the U.S. and EU, is critical for South Korea to take a leading position in global economic security discourse.

**Key Words** : Economic Security, Strategic Framework,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Advanced Industries, Non-Trade Agenda

---

• 논문투고일 : 2024년 10월 22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4년 11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11월 16일